

# 4대강 정비 사업 발진 ‘지방 살리기 프로젝트’ 본격 가동

- 경기부양과 일자리창출, 지방건설경기전인등일거다득의파급효과기대-

이명박 정부의 지방 살리기 프로젝트가 본격가동된다. 정부가 지역발전정책에 속도를 내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우선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이다. 지난해 10월 30일 경제 난국 극복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조치가 발표된 이후 지방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지방을 확대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때문에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을 골고루 발전시킨다는 전략의 제시가 필요했다. 두 번째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세계경제 위기를 맞아 경기부양이 시급해졌다. 경기가 가라앉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지면서 지방 경제를 떠받칠 대책이 필요해진 것이다.

## 5년 동안 10조원 투자

앞으로 5년간 지방에 10조원 가까이 되는 돈이 투자된다. 정부는 두 차례나 지역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1단계로 지난해

9월에 30개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해올 해부터 2013년까지 50조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경제, 사회 통합을 위한 신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교통, 물류, 관광 기반 시설 등을 확충하는 내용이다. 광역경제권별로 12개의 선도 산업을 선정해 5년간(2008 12년)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등에 5조 5,000여원을 투자하는 사업도 1단계 대책에 포함돼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발표된 내용은 2단계 대책이다. 초광역 개발권을 중장기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16개 시·군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 의료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여기에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도 가동해 총 42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 대책의 핵심은 지방에서 기업하기 좋

정부는 4대강 개발 프로젝트가 제대로 시행되면 19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23조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와 시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 여건을 만들어 일자리를 늘리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 개발을 위해 쓸 수 있는 돈도 늘려 주기로 했다.

우선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확대했다. 내년부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옮길 때 법인세나 소득세를 7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50%를 깎아준다. 지금은 5년간 면제하고 2년간 50%를 깎아줬으나 세금 감면 기간을 늘린 것이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을 위해 땅을 살 때 그동안은 50%를 정부와 지자체가 무상으로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70% 지원으로 확대한다. 지방 기업에 대한 창업 투자 보조금도 신규 투자액의 15%로 확대하고, 지방 기업이 신규 고용을 하면 1인당 월 6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지방에서 사는 데 불편한 것 중의 하나가 의료, 교육, 문화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우선 응급의료 시설 확충에 돈을 써서 2012년에는 전국 어디서나 비상시 30분 안에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체 임직원들의 걱정거리는 자녀 교육이다. 지방에 우수 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이번 대책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지방 광역시 및 주요 거점 도시에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하고 중소 도시에도 기숙형 고교를 세우기로 했다. 지방의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마이스터 고교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2년에는 사는 곳에서 15분만 가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방에 체육관·공원 같은 생활



체육시설을 많이 짓기로 했다.

이런 사업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방 재정을 늘리는 대책도 마련했다. 201년부터 정부가 수도권 개발로 거둬들이는 이익의 일부를 지방에 주기로 했다. 나눠주는 비율은 정하지 않았다. 광역시·도가 직접 거둬 쓰는 소득세·소비세를 신설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 4대강 개발 프로젝트

이번 2단계 지방 발전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개발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두 가지다. 홍수 및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불쏘시개'로도 활용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치수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지방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뜻이다. 사업을 시작하면 자금난에 시달리는 지방 건설사도 도울 수 있다. 일거다득의 카드인 셈이다. 4대강 정비의 필요성은 그동안 계속 제기돼 왔다. 매년 홍수나 가뭄 때문에 큰 피해를 보는 데도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손을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 홍수나 가뭄에 따른 피해 복구 비용만 최근 5년간 연평균 4조 2,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전국의 하천 정비를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은 연간 1조 원 규모에 그쳤다. 10년 전인 지난 1998년에 풀린 예산은 3,000억원이었다. 이후 예산은 200년에 1조원이 된 뒤 200년까지 매년 1조 원 수준에 그쳤다. 이렇게 돈을 쓸 틈도 없이 피해가 커져 복구에 4배 이상의 돈이 더 들어간 것이다.

## 一舉多得의 효과

예를 들어보자. 부산시와 대구시에 따르면 낙동강의 홍수로 인한 피해액은 태풍 루사가 왔던 200년에 1조 7,000억원대였다. 태풍 매미가 덮쳤던 2003년에는 2조원이

넘는 피해가 났다. 피해 정도는 다르지만 한강·금강·영산강도 홍수와 가뭄에 취약하기는 마찬가지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4대강 인근에서 매년 홍수로 인한 피해는 2조 7,000억원에 달한다. 이런 피해 규모만 산정한 것이다. 피해가 생기면 복구를 해야 한다. 복구 비용만 연간 4조 원 이상이 든다. 홍수 피해 규모는 늘어나는 데 사전 예방 투자가 부족해 사후 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다.

일본은 이와 반대로 사전 예방 투자비가 복구비의 4배나 된다. 당연히 피해가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투자해 피해를 줄이면 다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천 정비가 안 되면 걱정해야 할 게 또 있다. 가뭄이다. 조금만 비가 안 와도 가뭄 피해가 커지게 된다. 올 10월 기준으로 낙동강 주변 안동댐·임하댐·합천댐·남강댐·밀양댐의 저수량은 1억 5,000만 m³에 불과했다. 저수율은 38%다. 평년 저수율(57%)의 3분의 2에 그쳤다. 이런 극심한 가뭄 때문에 사용하는 물의 94%를 낙동강에 의존하는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물이 부족해졌다. 그나마 있는 물도 더러워져 주민들은 고통을 겪었다. 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는 지난해 9월의 수질 검사 결과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남 남해·산청 군 등의 8개 마을은 수도물 대신 계곡물이 나지 하수를 쓰기도 했다. 물이 부족해 제한 급수를 받는 지역은 전국 33개 시·군(주민 8만 명)에 달한다. 이 추세면 201년에는 약 8억 m³의 물이 부족해진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 14조원 투입, 일자리 1만 개 창출 기대

국토부 권진봉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이런 문제를 그대로 두면 주민들의 삶이 질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201년까지 14조 원

을 들여 대대적으로 하천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천 정비에 직접 쓰는 돈은 약 8조 원 정도고, 나머지는 농업용 저수지 개발과 중소규모 댐을 건설하는 데 쓰게 된다. 하천 주변에 자전거길을 만들고 체육·레저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주요 사업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하천 정비만 할 게 아니라 강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하면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 지난해 12월 말부터 충주(한강), 대구·부산·안동(낙동강), 연기(금강), 나주·함평(영산강) 7개 도시에 8,300억원을 풀어 사업을 시작했다. 제방을 보강하고, 중소규모의 댐과 조정지를 만든다. 강바닥에 쌓인 흙을 파내고 하천 주변도 정비해 수질도 개선한다. 저수지 재개발을 통해 물고기를 늘려 가뭄 때 비상용 수도 원활히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되면 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23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운하 사업과는 다르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 대운하논란이다. 운하를 만들려면 화물선이 다닐 수 있도록 수심이 적어도 6m 이상은 돼야 한다. 하천 정비는 강바닥을 깊게 파지 않고 강바닥 쪽을 넓게 파는 방식이라 운하 사업과는 다르다. 낙동강과 한강을 잇는 인공수로나 터널 건설 사업은 4대강 정비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대운하논란이 이는 것은 정부의 태도가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정부 일각에서는 “대운하는 취소가 아니라 중단”이라는 식의 발언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투명하게 4대강 정비 계획을



을 추진해야만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윤  
중앙일보 경제부 기자